

◆ 정부시책 ◆

'97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정

정부는 수입급증과 구조조정으로 국내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13-100%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산업활동에 긴요한 기초원자재로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관련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1-6% 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확정된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목재가구 등 13개 품목과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건의한 자전거 및 동부품,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개방되는 냉동민어 등 모두 15개 품목에 하반기부터 새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44개이며 이번에 새로 15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조정관세 부과품목은 모두 59개로 늘어나게 된다.

■ '97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전기관련 품목)

관세율 NO.	품 명	규 격 등	세 율 (%)	한 계 수 량
2812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 화물	설과 헥사플로라이드 (Sulfur Hexafluoride)에 한한다.	4	348메크릭톤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규소전기강의 것에 한한다.	4	수입전량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한다.)	규소전기강의 것에 한한다.	4	수입전량
8545	전 극	노용의 것에 한한다.	4	수입전량

기본관세율에 40% 포인트를 가감해서 부과하는 할당관세는 현재 87개 품목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중 관계부처에서 계속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알루미늄광,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 12개 품목은 제외하고 메탄올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80개 품목에 부과된다.

재경원은 “조정관세의 경우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는 산업 활동에 긴요한 기초원자재로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과 중소기업 관련품목 및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품목 그리고 서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가격안정 도모 및 원재료 수급애로 해소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전부품의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통상산업부는 향후 정보·통신기기의 핵심부품인 광소자의 패키징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광산업 기술기반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광소자의 첨단 패키징기술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패키징이란 기본광소자를 그 응용에 따라 외부회로나 시스템에 접속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그 응용에 따라 외부회로나 시스템에 접속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지칭함. 광부품에 있어서 패키징은 부품원가의 30%—50%를 차지하며 부품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술임.

최근 선진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업체는 향후 21세기는 광시스템 및 광부품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수년전부터 광부

품의 핵심기술인 패키징기술의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2002년에는 선진국과 동등 수준의 기반기술 및 설계·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는 광전소자의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해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정부와 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총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동 공동연구개발사업은 광전부품 업체 및 소재, 광응용기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10여개 업체, 관련대학 및 연구소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개발분야는 광소재·부품 등 4개분야, 광패키징용 광섬유 등 8개 과제다.

■ 광전부품의 세계시장규모 및 기술개발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1996	2001	2005	2010
세 계 시 장	219,420	341,560	375,710	413,270
국 내 시 장	15,359	23,909	26,300	28,929
수출기대효과	—	17,078	26,300	47,327
수입대체효과	—	23,909	26,300	28,929

정보기술製品 7월부터 관세 인하

오는 7월부터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시 타결됐던 정보기술협정(ITA)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정가입 43개국은 정보기술협정제품에 대해 오는 7월 1단계 관세인하를 시작으로 '98년 1월 2단계, '99년 1월 3단계 인하를 통해 2천년 1월에 최종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일본·EU·대만 등 4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ITA는 반도체·컴퓨터·통신장비·소프트웨어·반도체장비 등 203개 품목(HS 6단위기준)에 대해 오는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가입국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13개 국가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 일부 품목에 대해 2002년-2005년까지 관세철폐기간을 유예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TA에서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227개 품목(HS코드 6단위 또는 8단위기준)중 217개 품목에 대해서는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개인용 및 중대형컴퓨터, 휴대폰, 교환기, 반도체통신기기, LAN장비 등 10개품목은 2002년 또는 2004년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1단계 관세인하 대상은 반도체소자, 반도체제조장비, 전자계산기 등 30개품목이다.

이와관련 인도 등 상당수의 개도국들의 경우 내년 1월 2단계 관세인하 시점부터는 양허관세율이 현행 기본관세율보다 낮아져 이

들 국가로의 정보기술제품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벤처기업 병역특례 대폭 확대

병역특례자에 대한 동일법인내 연구소간 전직과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 창업이 허용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배정인원이 확대되고 업체별 배정인원의 통보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병역특례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제도 개선안을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는 정책결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과 법령개정 사항 등으로 구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조기배정, 지정업체 인원배정,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인원 확대, 연구소 선정분야 확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등은 정책결정 추진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기로 했다.

또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연구소 선정기준 완화,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편입

기준 완화, 전문요원 편입기준 확대,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 허용 및 복무기간단축과 여권발급절차 간소화, 국외연수 및 출장기간 확대,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전자·정보통신기기 제조업에의 편입 허용, 학력별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이 기업의 인력채용 시기와 일치하도록 현행 매년 11~12월초에서 10~11월로 앞당겨지고 업체별 배정인원의 통보시기도 현행 12~1월에서 11월중으로 앞당겨진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비율을 현행 28%에서 오는 2000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동일 법인내에서의 연구소간 전직을 허용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요건을 석사학위 이상 3인 이상에서 석사학위 이상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병무청은 또 벤처기업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수시 지정하는 것과 지정업체가 벤처기업 창업시 소속 전문연구원을 대표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의 전직을 허용하는 문제 등은 향후 병역법령 개정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외국 반덤핑조치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

通商産業部는 그동안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여 온 선진국들의 제소가 추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로이 반덤핑 제도를 도입한 개도국들의 제소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外國 반덤핑 조치에 대한 段階別 對應方案을 마련·실시하기로 하였다.

通商産部가 이번에 마련한 단계별 방안은

- ▲ 국가별 반덤핑 법령과 WTO를 통해 입수된 각국 정부의 반덤핑 법령 관련 입장을 일제 재정비하여 최근 현황을 유지하고
- ▲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각국 동향과 공고문을 신속히 입수하여 재외 공관과 국내외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WTO협정 및 조치국 법령준수 여부를 분석하며
- ▲ 분석 내용과 국내 산업 현황, 양국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별 基本 對應方案을 수립하여 兩者, 多者間 통상채널을 통해 반덤핑 조치의 적법한 운영을 촉구해 가기로 한 것이다.

通産部는 이를 위해 이미 世界貿易機構(WTO)에 법령을 통보한 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法令 情報 입수에 착수했으며, 반

덤핑조치별 분석작업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通産部가 WTO 자료등을 인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5년 한 해 동안 14건의 반덤핑조사를 받아 EU,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조사를 많이 받았으며,

- ▲ '96년 말 현재 11개국(EU를 하나로 계산)으로부터 54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品目別로는 전기·전자제품이 16개, 석유화학제품이 15개, 철강·비철금속 제품이 14개 順)

작년 下半年期부터 현재까지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6개 개도국으로부터 자동차용 타이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 10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거나 반덤핑관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소도 증가하여 '95년까지 2-4건에 그치던 반덤핑 제소가 '96년 10건, '97년 현재까지 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通産部는 최근 들어 先進國들이 새로운 조치 발동보다 기존 조치들의 유지나 종결에 중점을 두는 반면 開途國들의 반덤핑 조사 개시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評價하면서 이같은 현상은 先進國에서는 반덤핑 조

치가 公正競争 維持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국내 消費者나 관련 産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開途國은 교역 증대와 국내산업 이해 증가로 반덤핑 조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후발국의 반덤핑 조치 현황〉

국가명	대상 품목	조치 개요
인도 (3품목)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NBR)	'96. 3. 15 조사 개시
	Acrylic Fibers	'96. 9. 13 조사 개시
	Purified Terephthalic Acid(PTA)	'97. 1. 9 조사 개시
남아공화국 (2품목)	PTFE Thread Sealing Tape	'96. 3. 8 조사 개시
	Tyres for Motor Cars	'97. 1. 17 조사 개시
아르헨티나 (2품목)	Single-Phase Electric Motors for Domestic Washing Machines	'95. 12. 5 조사 개시
	Microwave Ovens	'96. 9. 2 잠정관세 부과 '94. 10. 4 조사 개시 '96. 9. 3 확정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1품목)	Polyester Staple Fiber	'96. 9. 23 조사 개시
필리핀 (1품목)	Electrolytic Tinplates H-beam	'97. 4. 16 조사 개시
태국 (1품목)		'97. 4. 25 조사 개시

전문展示會 참가확대 유도

통상산업부는 국내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자동차부품·발전설비·전자정보기기·설계기술분야의 한·일 기업간 제휴를 강

화하고 건축자재·건강식품·부품류 등의 품목별 전문전시회 참가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통상무역실장

주재로 통산부 대회의실에서 貿協·貿公·반도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쌍용·현대 종합상사 등 대일 수출규모가 큰 업체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엔화환율 변동에 따른 일본시장 진출방안을 점검하고 이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산부는 국내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업종별 전문전시회가 발달한 일본시장의 특성을 감안, 건축자재·건강식품·부품류 등의 품목별 전문전시회 참가확대가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동차부품·발전설비·전자정보기기·설계기술(CAD/CAM) 등의 분야에서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부품류와 전력기자재의 해외조달 확대에 대응, 일본시장 개척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자 상품시장, 정보화상품, 건강·환경상품 등 신규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貿公 등 유관단체와 업계는 우리 기업의 대일진출이 유망한 분야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로 중화학공업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

대되는 분야로 정보통신·건강·의료·복지를 △일본기업이 해외조달을 강화하고 있는 분야로 각종 부품류·기초소재·전자재·전력기자재 등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의 무역흑자 증가 및 경기회복 기대, 일본의 금리상승 등으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엔고로의 전환은 불투명하며 엔화 약세로 경쟁력이 약화된 주요 수출품목이 본격적으로 대일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엔화의 추가적인 절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환율하에서 일본에 비해 5-10%의 열세를 보이고 철강은 열연코일의 한·일 경쟁력이 110엔 수준에서 대등하며 조선은 110엔 수준에서도 일본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업계관계자들은 일본지역 진출확대를 위해 △비관세 장벽 철폐 △대일수출유망품목 및 현지 바이어 발굴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자본재 전략품목 개발자금 支援

통상산업부는 금년도 신규개발 자본재 263개 품목의 개발을 수행하게 될 개발사업

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들 업체에 2,482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기계·소재 부문이 170개 1,507억원, 전기·전자부문 65개 739억원, 섬유·화학부문 28개 236억원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대건기계·태인테크·아모스·선진화학 등 263개 품목 개발업체는 연리 6%, 융자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장기저리 개발자금을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자본재개발에 소요되는 2,482억원중 1차년도 소요분 2천억원은 올해안에 지원되며 개발금액이 큰 일부품목의 경우 개발비를 분할하여 일부 개발비는 내년에 지원받게 된다.

통산부는 “올해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사업

은 1개품목 지원한도가 작년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한국중공업의 플라즈마 탈황·탈질 시스템, 통일중공업의 반자동 다단변속기, 성미전자의 수요밀집형 광가입자 전송장치 등 대형과제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따라 평균개발비도 9억4,4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편 통산부는 지난 1월 실시한 자본재개발품목 수요조사에서 개발비 수요가 9,6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지원규모는 2천억원에 불과, 자본재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외화자금으로 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이들 중 핵심품목으로 선정된 54개에 대해서는 개발착수 단계부터 기술지도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시험·연구설비 DB化 추진

높은 시험·연구설비 가격 때문에 구입은 물론 기술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중소기업에게 이들 高價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산하기관인 품질기술원과 11개 지방청을 비롯해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시험·연구설비 현황을 자료화, 산·학·연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650여 기관이 보유중인 1만8천여점의 고급 설비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하는 한편 올해안에 부산대학교 등 134개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새로 구입한 2

천여점의 설비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매년 새로운 내용을 축적, 보완기로 했다.

이들 시험·연구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PC통신을 통해 ‘천리안’에 접속한 뒤 ‘go tre’ 또는 초기화면에서 ‘17.과학/문헌→22.특허/상표/저작권→9.시험·연구설비 이용알선’을 차례대로 채택한 뒤 설비별·시험항목별·보유기관별 등으로 필요설비를 검색 및 확인하면 된다.

PC를 갖추지 못한 업체의 경우 본청 기술분석과 및 11개 지방청에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검색은 물론 이용방법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안내해 준다.

중기청은 현재 ‘천리안’을 통해서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비이용 안내시스템을 보완, 올 하반기부터 중기청 인터넷(www.smba.go.kr)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설비를 영상정보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中企 애로기술 實用化 검증센터 설립

대학에서 개발된 중소기업 애로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검증센터가 건립된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65개 공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이 개발한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빠른 시일내에 실용화하고 대학의 연구결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증 지원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국고 166억원과 민자 78억원 등 총 244억원을 투입, 서울대내 사이언스 파크에 대지 300평, 건물면적 600평 규모의 검증센

터를 설립기로 했다.

이 센터에는 연구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한 설계실과 가공실, 회로 구성실, 시험실, 연구기술 정보수집 및 교류를 위한 정보프라자,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등이 갖춰진다.

통산부는 검증센터가 가동되면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곳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자와 연구교수가 공동으로 시작품을 제작, 성능을 평가하여 대학연구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지도인력 풀’體制구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애로 해결에 적합한 전문가를 신속하게 중개·알선하는 체제인 ‘기술지도인력 풀(pool)’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지도인력 풀’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도가 가능한 대학교수·연구원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DB)로 현직자는 물론 퇴직자·해외기술인력 등 우선 5천명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DB는 산업에 이용되는 기술을 기계·생산기반·화학·섬유 등 13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분야별로 5단계로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DB구축에 따른 성공이 우수인력의 참여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를 추천받는 한편 오는 7월부터는 기업·연구기관·학교 등 기술인력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중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00년대까지 인력정보를 2만 명 수준까지 확충하는 한편 자료의 최신화를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